

공공기관 부패 뿌리 뽑는다

권익위, 내년 2월 28일까지 채용비리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12월 1일부터 3개월간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내년 2월 28일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공공기관의 ▲인사청탁 ▲시험접수 및 면접 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항응·금품수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 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 청탁 행위다.

대상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

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 받는 지방공공기관(859개)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기타 공직유관단체(277개)다.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후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감독기관이 신고내용을 활용해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자가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신분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에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는 정부세종청사 세종종합민원사

무소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에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와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88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권익위 임운주 부패방지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로 채용비리가 점점 은밀하게 이뤄지는 민중 내부신고가 아니므로 적발이 어렵다"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로 공공기관에 남아있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2017년 11월부터 매년 공공기관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채용실태를 점검했다. 내달 9일부터는 147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3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뉴스시스



참여연대 항의 속 진행 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장 한편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가이드라인 재논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장 한편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가이드라인 재논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6·15남측위 "이완용은 나라 팔고, 나경원은 평화 팔아"

사회단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가 최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 자제' 발언 논란에 대해 "이완용은 일제시대에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나경원은 국회의원 뺨지를 걸고 평화를 팔아먹고 있다"고 비난했다.

6.15남측위는 지난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나 원내대표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둘이) 무엇이 다르냐"며 이같이 말했다.

발언에 나선 한충목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나 원내대표의 미국, 사대 외교를 보면서 1997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청와대 행정관을 포함한 3명을 북한 통일전선부 간부와 비밀회동을 갖고 군사충동을 부추렸던 게 생각났다"며 "한반도 평화는 아랑곳 하

지 않고 대결과 전쟁으로 표를 얻고자 한 정권이 한나라당인데 이회창 총공사건과 나경원의 외교행각이 뭐가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상임대표는 "이방 원내대표가 평화외교를 하러 미국에 가서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 구걸 행각을 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보다 금뱃지가 중요하냐"고 지적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는 당장 원내대표직과 의원을 그만둬야한다"며 "이게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라고 했다.

권명숙 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평화보다, 국익보다 민심보다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나경원은 의원 자격이 없다"며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총선 승

리를 위해 아무 말이나 하는 정당은 당장 해체돼야한다"고 했다.

동작구 주민으로 참석한 최서연(29)씨는 "남북정상회담 당시 박수도 못하고 떨떠름하게 지켜보던 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얼굴을 다 기억한다"며 "더 이상 전쟁 위기를 버리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미국을 방문했을 때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총선이 열리는 내년 4월을 전후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나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뉴스시스

정의용 "北 도발, 매우 유감... 재발 방지 촉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9일 북한이 연평도 포격전 9주기인 지난 23일 서해에서 해안포를 사격하는데 이어 전날 동해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한 뒤 "남북 군사합의서를 첫 번째로 위반한 것에 대해 저희가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 "중요한 것은 북한

과의 관계가 통제 가능한 범위를 이탈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빨리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해나가고 설득해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미 정부 모두 북한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연말 시험을 매우 엄중히 보고 가급적 조기에 고위급 협상,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정 실장은 전날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관련, 한일 당국간 정보에 차이가 있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8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력장(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하고 난 이후 4번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 교류가 있었다"며 "어제 방사포(발사) 이후에는 정보 교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보 교류의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단거리 발사체 관련 정보는 우리 탐지 자산으로 충분히 확보했다"면서도 일본이 원한다면 제공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으로부터의 요청과 관련해선 "아직 보고 못 받았다"고 답했다.

文 대통령, 5일 中 왕이 외교부장 접견... 사드 언급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5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한다.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한중이 갈등을 겪은 후 첫 방한이다.

이 자리에선 한중 양자 관계를 비롯해 남북 문제, 한반도 정세 등 지역 및 국제 정세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드'와 관련해

양자 간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 부장은 내달 4일부터 이틀간 공식 방한한다. 2015년 10월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방한한 리커창(李克強) 총리를 수행하며 한국을 찾은 뒤 4년 만이다. 이 부장의 공식 방한은 지난 2014년 5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초청에 따른 것으로, 첫날 강 장관과의 회담과

공식 만찬을 가진 뒤, 둘째 날 문 대통령을 접견하는 순서로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방한은 내달 하순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과 연계 조율 성격에 방점이 찍혀 있다. 나아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방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방한에서 사드 갈등으로 촉발된 한국에 대한 관광·문화 금지 조치인 '한한령(限韓令)' 해제 등이 거론될지 시선이 쏠린다.

/뉴스시스

노영민 "하명 수사·감찰 무마 의혹 관련 靑 내부 조사 중"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9일 김기현 전(前)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내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예산 심사에 출석해 김 전 시장 건과 유 전 부시장 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했는가라는 자유한국당 박상도 의원의 질문을

받고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지금도 조사 중인가"라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대상자가 주로 누구인가"라는 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질의에 "당시 민정수석실 근무자로서 현재 청와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진상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대략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파악이(됐고) 대충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노 실장은 "진상 조사 대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되는가"라는 유성열 대안신당 의원의 질의에 "안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것은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 있고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조사 권한은 없지만 팩트체크 차원에서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알아보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